

정부부처 조직개편 '세부 밑그림' 골머리

대폭 줄일까... 최대한 살릴까 고심

정부 조직개편 후속추진단이 각 부처의 인원 감축 기준을 제시하고 29일까지 직제개편안을 내도록 요구함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주말에도 불구하고 밑그림을 짜느라 분주하다.

27일 과천 관가에 따르면 통폐합되는 부처의 경우 서로 다른 일을 하던 부서를 한 지붕 하에서 어떻게 재편할지도 문제인데다 정책홍보 관리실처럼 중복되는 부서는 인원 감축 압박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대폭 줄이라는 새 정부 코드에도 맞추고, 잘려나가는 인원은 최소화해야 하는 양 갈래 사이에서 묘안을 짜내느라 여념이 없다.

○재경부, 기획처=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 기획재정부로 재편됨에 따라 두 부처는 실국별로 조직구성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전체 정원도 조정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엇보다도 기획·

29일까지 개편안 요구... 실·국 구성 정원조정 분주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 세부 밑그림은 그리지 못했다.

두 부처는 이에 따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기획파트를 실 차원으로 할지, 아니면 국 차원으로 할지, 또 공공혁신본부와 공기업 민영화 등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 조직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기존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구 기능까지 결합하는 또 다른 '거대부처' 지식경제부는 통합 조 직의 실·국 등 세부 조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통합 부처와 기존 부처간 중복, 유사 기능이 많은데다 조직배분을

놓고 알력이 만만찮은 탓이다.

부처 간 협상과정에서 정책홍보 관리실 등 통합대상 부처의 지원 부 분이 지식경제부에 결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처음 조직개편이 발표될 때에 비하면 조직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총인원 1천350여명, 1급만 7~8명에 이른다.

○건교부=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 새로 탄생하는 국토해양부를 8실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만 1실6분부이며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오는 조직은 해양정책본부, 해양물류본부, 항만국 등 2본부1국이어서 9실(본부 포함)이 8실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복수차관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차관이 국토, 건설, 부동산쪽 업무를 맡고 2차관은 교통·물류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농림부=농림부는 장관 밑에 농업을 관장하는 1차관과 식품 등 여타업무를 담당할 2차관을 두고, 실은 정책기획실 하나만 둔다는 초안을 만들어 놓고 연일 회의를 거듭하며 계속 직제를 조정하고 있다.

본부는 식품산업, 수산정책, 국제협력 등 3개를 두고 식품산업본부 아래에는 소비안전기획, 친환경농업, 축산산업, 식량산업 등의 국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정책본부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오는 수산정책국과 어업지원국 등을, 국제협력본부 아래에는 현재의 농림부 국제농업국과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오는 국제협력관실 기능을 받아 원양산업국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 출범 한 달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성운 행정실장, 이동관 대변인, 김형오 부위원장, 이 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정보과와 간사, 남주홍 정부분과위원.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공방

오늘부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28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내달 출범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통일부 존폐 문제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폐합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의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정부조직법을 28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 상임위 심의 상황과 여야간 견해차 등을 감안할 때 처리시기는 설 전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당은 휴일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특위(위원장 김진표) 2차 회의를 열어 인수위의 개편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5개 부처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 대안 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부는 온전하게 기능을 되살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정보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은 임시국회 개최 첫날인 28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 대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짓는 방침이다.

신당은 특히 통일부 존속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립각 커지는 신·구 권력

정부 조직개편·교육개혁안·광역경제권 사사건건 충돌

정권 이양기에 신·구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한달 뒤 물러날 참여정부와 한달 뒤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대치 전선이 첨예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정권 이양기에는 신 권력이 등장하면서 구 권력은 레임덕과 함께 퇴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신·구 권력의 충돌은 정부 조직개편부터 시작했다. 인수위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명분으로 내걸고 통일·여성·정보통신부 등 지난 10년 정권의 '랜드마크' 격인 부처들을 통폐합하려고 하자 청와대는 '군사작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트집잡기와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맞받아치면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감축을 놓고는 이 당선인과 노 대통령이 직접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 당선인이 지난 22일 공직자에 대해 "이 시대에 약간의 결립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언급하자 노 대통령은 즉각 "공무원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교육개혁안도 충돌음을 내고 있다.

인수위가 수능등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입 자율화 등의 대책을 쏟아내자 청와대는 "에고도 없이 변경하는 건 학교현장, 교사, 수험생, 학부모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인수위의 '5+2'의 광역경제권에 대해 청와대는 "작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보고한 '초광역경제권'과

거의 같다"고 공격을 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수위에 대한 청와대의 업무보고가 아예 생략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공산도 있어 보인다.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수위로서는 자신들의 정책코드에 입각해 기존 정부의 틀과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에서는 '조건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또, 4월 총선을 앞둔 고도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의 충돌은 내달 정권 출범 전까지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태평고' 확정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범훈)는 내달 25일 취임식에 사용할 엠블럼(사인)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엠블럼은 태평소와 북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희망의 울림소리가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엠블럼의 명칭은 '태평고(太平鼓)'. 태평소는 음식이 매우 강하고 높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루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북은 가장 힘차고 박진감 넘치며 전진을 상징하는 악기라는 점에서 모티브로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태평고는 당선인의 신년 화두인 시화연풍(時和年豐)의 의미를 포함하는 물론 취임식장에서 선포할 대한민국의 비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총리에 한승수씨

오늘 공식 발표...대통령실장 유우익씨 사실상 내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 변화특사를 공식 지명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리와 대통령실장(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내일 총리부터 먼저 발표된 뒤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 각료 등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은 "초대 총리로 한승수 특사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부

동산이나 병역, 납세 등 개인 신상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증 받았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팀은 이날 이 당선인에게 한 특사에 대한 정밀검증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장에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는 이 당선인의 외곽 자문기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으로 경선 때부터 정책 조언을 해 왔으며 이번 총리·각료후보군 검증작업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 당선인은 이르면 총리 인선 다음 날인 29일 대통령실장을 발표한 뒤 급중중 청와대 수석 명단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현재 각료 인선도 거의 마무리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상황을 봐가며 발표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실장인 이명박의 반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외교통일부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을 유보한 채 부분조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ll Rights Reserved' (권을 매각)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featuring a 'Free Exam' (시험 무료) offer.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공인중개사) with 'Nationwide Exam' (전국수석 합격률 1위) and 'First Exam' (첫진도 시적반) details.

Advertisement for 'Bio-Sync Care' (바이오싱크케어)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